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공약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정책공약으로 살펴본

제주교육의 미래

최영근(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연구원)

I. 들어가면서

언제나 대선이나 총선 때가 되면 대통령 후보 및 정치 입후보자들은 백년대계를 위해 확실한 교육정책을 마련, 실현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교육의 현장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교육은 더욱 부실해지고 사교육이 판치는 교육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기대할 만한 교육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혼돈과 좌절 속에 일관성 있는 좋은 교육정책이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은 사교육 문제를 더욱 야기시켜 가진 자와 못가진자로 양분되어 교육기회의 균등은 무너지고 교육과정 및 결과의 평등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바, 막중한 책임감과 국민이 거는 기대 또한 크다.

교육은 전체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민의 자아실현과 국가의 미래 기회, 그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핵심기능이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이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기본바탕

과 함께 톱니바퀴가 되어 제주를 이끌어갈 중요한 출발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도를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 육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4대 핵심산업과 이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 육성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교육과 의료의 개방을 꼽을 수 있다. 향후 제주는 양적인 발전을 넘어 21C 양과 질이 적정수준을 넘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작은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교육을 통하여 미래 지식 기반이 될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동양의 될 인재들을 발굴하는 가운데, 중요한 비전 및 제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에 실시되었던 대통령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를 통해 나왔던 당선인들의 정책공약을 살펴봄으로써 제주교육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 정책공약내용 및 특징

1.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 공약 내용 및 특징

1) 정책공약내용

도 공개한다. 사실상 교육부에 의한 ‘관치 교육’을 끝내겠다는 의미이고,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1974년 이후 34년간 지속된 평준화 교육은 퇴장하고, 자율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뜨고 있는 것이다.

〈표 1〉 이명박 당선인 교육정책과 대통령직인수위 발표내용

이명박 당선인 교육공약	구분	인수위 발표(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자율화로 3불정책 수정 - 1 단계: 학생부·수능반영 자율화 - 2 단계: 수능과목축소(7개 → 4~6개) - 3 단계: 완전 자율화 ■ 수능 등급제 전면 재검토 	대학 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업무 대학교육협의회에 완전 이양, 대학자율로 선발 - 본고사 대체 수능Ⅱ 도입검토 ■ 수능 등급제 개편 (2월초까지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형 사립고 100개 - 기숙형 공립고 150개 - 마이스터고 50개 육성 	고교 다양화와 학교 설립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학교 300개 설립추진 - 자율형사립고·특목고 지정 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완전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슬림화 또는 통폐합 	교육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국립대사무국장 순환보직제 폐지 - R&D과기부·교육부 통합,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교육부인적자원개발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학력정보 공개 	교육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학업 성취도, 학업성적 매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직인수위 발표내용은 2일 교육부가 보고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3불정책은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 대학자율에 맡기고 초·중등 관련 업무의 상당수를 각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등 ‘규제’에서 ‘자율’로 큰 틀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월 2일 공개한 대입 개혁방향은 기존 체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대입관련 제도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기고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지정 권한을 시·도로 완전히 넘기며 ▶평준화 교육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적 정보

(1) 학생선발 대학에 맡긴다.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대입전형 등 입시관련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들의 협의 기구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각 대학 입시전형 심사,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영어 또는 단답형 금지 등)’ 심사기준 설정 등 현재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입, 학사운영 관련 업무가 대교협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대입관련 업무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대표적 대

입 규제인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수능 등급제 폐지

최근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등급제는 영역별 등급표시외에 백분위와 표준점수까지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200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수능등급제는 시행 1년만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인수위는 이어 올 고3부터 학생부와 수능 반영 비율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현재 시범 실시중인 ‘입학사정관’ 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고 2010학년도 이후부터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대교협이 수립토록 했다.

(3) 획일적 교육 탈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전국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고교 30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교육부도 공약이행 방안을 2일 인수위에 제출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자율성을 부여한 형태며, 기숙형 공립학교는 주로 지방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정도로 나뉘었던 학교형태가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가 교육과정 운영을 시·도 교육청에 맡기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늘어나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4) 학교간 학력차 인정

매년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성적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은 학교, 지역간 서열화를 우려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 큰 행정구역별로만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지역뿐 아니라 단위학교별까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 학교별로까지 성적공개 범위가 확대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전국 1위부터 꼴찌까지 학교의 서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여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5월부터 학교정보가 공개되면 전국 2100개 고교의 교과목별 학업성취 수준이 드러난다. 서울지역은 2010년부터 중3학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학교 선택제가 시행되면 학생들 실력이 좋은 고교로 학생이 몰릴 수밖에 없다. 학생의 뜻에 관계없이 고교를 강제 배정하는 고교 평준화는 자연스럽게 깨지게 된다.

(5) 교원관련 기능 및 초·중등교육관련 기능 지방이양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 등과 관련한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초·중등학교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분부 직원들이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국립대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순환보직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초·중학생의 조기 자비유학은 현행 규정상 불법으로 돼 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초·중학생의 자비유학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초·중

등교육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우선 자율학교, 특수목적고 등의 지정, 설립허가 및 해지 등의 업무를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가 사전협의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이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6)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최근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총정원 2천명’이라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정원 배분비율은 이미 원칙상 ‘52대 48’로 결정됐으나 현재 진행 중인 대학별 로스쿨현장 실사결과에 따라 수도권에 5%가 더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권역별 배분비율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52대 48’을 원칙으로 하되 실사결과를 토대로 총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배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 영어 공교육 강화

차기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는

〈표 2〉 평준화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전환

평준화 교육	⇒	자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편일률적인 학교·교실 ·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국제고 외고 등 설립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학교 등장 ·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공립학교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 경기도 동탄신도시 등에 외고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정보 비공개 · 좋은 학교·나쁜 학교 정보 없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차이 공개 · 2100개 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 학교별 학생수준 파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불인정 · 시·도교육청 학생 강제 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학부모가 학교 선택 · 서울은 2010학년도부터 학교선택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국가가 통제 · 교육부가 수립한 교육과정에 따른 획일적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 시·도교육청도 교육과정 편성에 더 많은 영향력 발휘 ·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가능

다음과 같다.

- ① 2010학년도부터 고교 영어수업 영어로 진행
- ② 수능에서 영어과목 폐지
- ③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체계 확립
- ④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⑤ 영어잘하는 대학생 활용
- ⑥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2) 정책공약의 특징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질적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교육혼란의 10년’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두 정부 모두 백년대계를 강조했지만 국민의 정부에 선 7명, 참여정부에서는 5명의 교육부 장관을 바꿨고, 장관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학생, 학부모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교육학자들은 10년간의 교육정책은 정치적 입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일관성이 결여됐고, 특히 참여정부는 포퓰리즘에 영합해 수월성과 형평성이란 교육의 균형을 깨버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정부시절 대입정책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기치로 내건 문민정부의 5·31 교육정책 기조를 기본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 대의명분은 결국 평등과 평준화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다양한 교육',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많은 학부모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참여정부는 임기 내내 대학 및 사회와 입시자율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 왔다. 3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은 물론 수능·내신의 실질반영비율과 논술문제 유형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강요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대학들에는 행정·재정적 제재를 연계하기도 했다.

2.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정책공약내용 및 특징

1) 정책공약내용

양성언 교육감 당선인은 '글로벌 제주교육 7대 비전'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교육경쟁력 확보에 주력, 이를 위해 ▲제주학생 학력 전국 최상위 수준 도약 ▲독서, 논술교육 강화 ▲초, 중, 고교 외국어교육 내실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학교' 시범운영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추진, BTL 방식 추진, 영어타운과 연계 ▲방과후 학교운영 내실화 등이다.

△구체적 공약내용

- 양성언 당선인은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 및 교실수업방법 획기적 개선을 위한 수업장인교사제 운영,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좋은 교풍세우기' 운동, 제주의 전통문화교육을 통한 정체성교육 강화 등 내부적 교육혁신 정책을 강조했고,

- 지역간, 도·농간 교육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읍면지역 중학생에 학교운영비 전액 지원, 유치원 종일반 전면 실시 및 초등 보육교실운영 확대, 신제주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학생중심의 방과후학교 확대, 장애학생을 위한 탄력적 학제운영 등 특수교육의 내실화, 지역 및 학부모교육행정 모니터링제 운영,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제주생태교육, 4·3관련 평화인권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살아있는 외국어교육 활성화, 맞춤형 진로·진학정보시스템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의 100% 실시, 국제수준의 '제주형 자율학교' 성공적 정착, 학교도서관·어학실 및 다목적 강당 100% 설치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공약했다.

-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해 영어교육도시 자체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이 주체적인 역할은 할 수 없지만 영어교육도시내에 조성되는 학교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제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정책공약의 특징 -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의 평가분석을 중심으로.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였던 양성언 당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우선순위 10대 공약을 대상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 의해 평가한 내용을 수합, 분석했다.
- 특징적인 정책으로 '유치원 종일반 전면 실시', '제주형 자율학교 정착', '장

기 치료학생을 위한 병원학교운영’, ‘친환경급식 100% 시행’, ‘중증 장애 학생 재택순회교육 전담교사제’ 등은 돋보이는 교육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다.

- 양성언 당선인의 10대 공약 가운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약은 ‘제주 정체성 살리기 교육전개’ 정책이다. 이 공약은 제주교육 현실에 적절하고 진정성과 현실성이 있는 공약으로 평가를 받았다. 세계자연유산 환경교육, 4·3 평화교육, 전통문화 교육 등이 돋보이는 반면, 이들 교육실현을 위한 전문교원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 반면 가장 부실한 평가를 받은 공약은 ‘살아있는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제주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접근이 미흡하고 추진기한, 재원조달 방법에 구체성이 없어 효과성에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영어몰입교육 활성화에 따른 학교급별 계획 등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Ⅲ. 제주교육의 과제

1. 차기정부 교육의 과제(권대봉 고려대 교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 방향 참조)

-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 학습자에게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교육선택권은 인권이면서 공교육을 만족하고 사교육을 줄이는 접경이기 때문이다.
초·중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로 특화되어야 하고, 지금같이 강제배정이 아니라 근거리 통학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도 평준화된 일반계 고등학교, 특정종교학교, 특목고, 특성화된 전문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공·사립고, 대안학교 등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평준화된 일반계 고등학교 안에서도 특수목적 학급을 설치하여 선택할 수 있고,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목별·수준별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기숙형 학교를 선호하거나 엘리트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에게는 그러한 학교를 제공하고 그들이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선택의 자유를 주려면 국민들의 서로 다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 체제가 변화해야 된다.

- 학교의 자율권 보장 :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학교가 변화해야 교육이 변할 수 있다. 학교가 변화하려면 교사가 변화해야 하고 교사가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려면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고 교권이 존중되려면 타율로는 한계가 있다.
- 정부의 책무성 이행 : 학교의 책무성이란 교육의 책임뿐만 아니라 책임을 받은 교육의 결과를 보고하는 책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가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규수업 시간에 과목별·수준별 이동식 수업실시를 유도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학생들이 방과후 사교육을 찾는 이유는 자기수준에 맞는 공부를 보충하기 위함이다. 공교육에서 자기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편다면 사교육비는 줄어 들 수 있다.
- 실용적인 사회경제정책 뒷받침 : 보다

근본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성 이행은 모든 학생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도록 유인하는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강소국인 핀란드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유능한 교사가 이끄는 공교육 제도다. 핀란드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자기적성에 따라 직업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중학생부터는 자기적성과 선택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갖춰야 한다. 대학교육을 받고 실업자나 무직자로 방황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사회에 진출하면 직업인으로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의 사회경제정책과 맞물리는 교육 정책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

차기정부는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책무성 이행을 제대로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용적인 사회체제와 국제화, 정보화, 첨단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핵심 고급인력과 기반인력은 부족하지만, 대졸자의 공급과잉으로 청년실업이 가중됐고, 기업의 구인난과 취업희망자의 구직난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학교와 노동시장의 시스템 적합화 정책, 고졸 5년차와 대졸 1년차를 일정기간 동등하게 대우하고 그 이후 개인 역량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인적자원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국민이 교육고통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자아실현과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2. 제주교육의 과제

2007년 한해도 제주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폐합 추진에 따른 갈등과 첫 주민직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탄생 등을 들 수 있다.

통합만이 살길이라는 현실론과 대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고수론이 팽팽히 맞선 양대학 통합문제는 제주교대측과 학생간 갈등문제로 비화됐고, 학생들의 장기간 수업거부로 집단 유급사태라는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제주대는 제주교대 통합과 함께 대학의 자존심이 걸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유치전에 뛰어들어 1월말이면 가인가를 얻는 대학들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와 함께 제주교육계는 제주시내 인문계고 신입생 배정방식을 놓고 진통을 치러야 했다.

또한 첫 주민직선으로 제13대 교육감에 양성언 현 교육감이 당선되어 제주교육사회의 위상변화와 함께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양성언 교육감이 제1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칭)제주국제고가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연계·설립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제주국제고는 지난해 도시계획시설(학교)이 확정, 학교 설립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에 유치되면서 제주국제고는 사실상 영어교육도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특히 국제고 건립이 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업에 포함되면서 한남리에 추진됐던 제주국제고는 사실상 신설이 불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양성언 당선인이 그 동안 일궈 놓은 안정된 토대를 바탕으로 ‘교육민의’를 담고 혁신적 교육자치를 구현하는 위대한 제주교육 성공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공약실천을 위한 시스템도 가동시켜 장·단기 이행공약 및 공약이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공약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공약실천에 필요한 1천5백여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 상대 후보와 두 차례에 걸친 선거전으로 인해 양분되어 있는 교육계를 봉합하여 상대 후보의 훌륭한 공약도 수용하여 위대한 제주교육의 성공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활성화, 학교내 폭력,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인재육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서비스 확대 등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으로 인구가 편중되는 현상이다. 이로 말미암아 도시지역 학교는 과대·과밀 현상을 초래하고 읍·면지역 학교는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

IV. 나오면서

(김덕산 광주문화중학교장, 차기 정부에 바라는 좋은 교육 참조)

대통령직인수위가 대학입시와 초·중등교육관련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제주도내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을 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주지역에서 자율만 앞세우면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보장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자율만을 강조하는 대학입시 정책이 마련될 경우 경쟁력 면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 사교육비 절반신화 :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아픔과 열정을 가진 이명박 당선인에게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꼭 실천해주길 바라는 이다. 당선인이 밝혔듯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올해 30조원이 넘을 걸로 추정된다. 전체교육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당선인은 2012년까지 사교육비를 현재의 절반인 15조원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대입 자율화와 학교 다양성 확대를 통한 공교육 강화가 그 실천 방안의 핵심이다. 모든 사교육의 종착역인 대입제도는 학생부·수능반영 자율화·수능과목 축소·완전 자율화 3단계로 수술하겠다고 했다.

한편,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은 사교육이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준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또다른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자질은 있지만 그것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교육의 내실화와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방과후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둔 때문에 교육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과후 학교운영, 수강권 배부 등 다양한 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또한 방과후 학교의 강사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보수를 달리함으로써 강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지역 만큼은 타 시·도와 달리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win-win’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사교육기관도 엄연히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이란 뿌리에 바탕을 두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초·중·고등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낡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등 획일적인 교육문화를 버리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의식을 가져야 한다. 즉 학생들의 인성과 적성, 잠재능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혁신을 하려면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을 섬기는 자세로 정말 신중하고 치밀하게 하고, 인기영합을 위해 단기처방을 하지 말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개혁이 필요하다.
- 지역간, 계층간 격차해소는 교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주형 자율학교’이다. 제주형 자율학교중 하나인 대흘교는 한때 폐교 위기에 처했으나 지금은 학생수가 100여명을 넘고 있다.
- 공교육강화 방안으로는 각종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독립된 전담기구 운영, 학교혁신 차원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개

발·보급,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교원연수 확대 실시 등의 사업을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해야 하겠다.

- 교원평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평가로 인해 자칫 교사들의 사기저하 등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교원들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갖고 가르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요즘 학교교육에 임하고 있는 일선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제반 업무처리와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빚어지는 마찰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행정적인 과다한 업무에 시달려 교사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책무성은 학생의 바른인성과 학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OECD수준에 맞는 학급, 학생 수 및 적정한 교사의 시간배당 등을 위해 교사의 충원 및 행정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스승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바른 인성을 심어주어 모든 교육이 가정 교육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 교육을 국가재정 배분의 최우선에 두는 결

단을 내려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도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지난 4년간 교육재정은 4.9%에 그쳤다. 교육개혁의 핵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교육재정이 부족하여 학교시설과 교육기자재가 노후화되어도 제때에 보수나 수리를 하지 못하고 적은 비용의 학습준비물 확보도 어려운 학교가 많이 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쾌적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재정부터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양극화에서 오는 교육기회의 균등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력있는 민주시민을 길러 더 이상 정부의 교육정책을 불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확립이 교육의 기초적인 초석을 다져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차기정부에서는 명실상부한 교육복지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재정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지원은 한정적이다. 결국 제주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노력과 비례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자들도 한번쯤 학교를 방문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제주교육을 뒷받침할 부서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주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가상준(2007), 『2007년 대선과 이념』, NGO연구 제15권 제1호

강원택(2003),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이슈와 후보자 전략”,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회의 발표논문

박희봉(2007),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비교 분석 필요성 및 방법”, 한국정책학회

양승실(2007), “우리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강원광장 기획특집

윤용희(2000), “제16대 총선의 정책과 공약 선거”, 한국동북아 논총 제14집

이현출(2005), “선거공약의 정치과정과 함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홍성결(2007), “5·31지방선거에서의 광역단체장 선거공약에 대한 SMART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3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2007),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발전방안』,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07), 『‘참공약’ 평가 제주매니페스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www.ccej.or.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동아일보 www.dongso.com

조선일보 www.chosun.com

중앙일보 www.joins.com

제주의소리 www.jejusori.net

제주일보 www.jejunews.com

제민일보 www.jemin.com

한라일보 www.hallailbo.co.kr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www.manifesto.or.kr